

전북도의회 5분 발언

“도교육청 비리 뿌리 뽑아야”

김희수 의원, “감사제도 강화돼야” 주장
“감사기법 개발·전문성 강화 이뤄져야”



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도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전북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비리를 뿌리 뽑는 감사제도 구축과 기능강화를 촉구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더불어민주당·전주6) 의원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교육청 감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기구 조직이 타 지역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감사제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가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현재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부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였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비

리과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도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주지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으로 학교회계에 개입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립자와 재단 사무국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이 ‘사학비의 종합판’이라고까지 칭하며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관련 학교 교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하면서 지역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인사교류 해야”

이병철 의원, 전북도 인구감소 대책 등 해법 제안



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항공우주, 원자력, 공공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인사교류는 업무 유관성이 높고 업무역신, 정책개발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적인 파견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출원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등을 대상으로 파견 필요성·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인원을 조정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양 기관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은 21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상호간 인사교류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자료(산업연구원/2018.10)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동반이주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

시된다고 말했다.
이 “전북도 인구감소 대책 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 노력과 함께 이전완료한 기관과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이전공공기관과 더욱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범정부 협업 소통강화를 위해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시행했고 소방청은 119구급상황센터에 서울대병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



전북도의회는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전주지역에 영업 예고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2곳의 개점 철회를 축하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철회하라”

도의회, 결의대회 열고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 촉구

민주당 등 정당, 신세계그룹 분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는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전주지역에 영업 예고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2곳의 개점 철회를 촉구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7년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다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협상이 결렬되자 전주 2곳에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준비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마트는 3곳의 직영점 개점을 철회하기에 앞서 가맹점 2곳의 영업개시를 예고했다”며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오는 23일이면 영업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동태상관까지 싸늘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판법과 품수라고 규탄했다. 강용구 농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노브랜드 가맹점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설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부담비용을 51%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즉각 철회와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더불어

정의당, 30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정의당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최석 대변인은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소하 원내대표 임기가 29일 만료됨에 따라 오늘 의회에서 이같이 일정을 결정했다”며 “원내대표 후보등록은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로는 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이 거론된다. 1년 임기의 정의당 원내대표직은 연임 제한이 없다. 다만 기간 관례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은 경선보다 합의 추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서거한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를 이어 8월부터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왔다. /뉴시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에 성경찬 의원... 내년 5월 20일까지 1년동안 활동



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특위는 전북도와 협력하여 한빛원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이 한빛원전과 관련하여 원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빛원전 대책 특위는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64회 정례회에서 활동계획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성경찬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김기영, 김만기, 김철수, 니기학, 성경찬, 이정린, 진형석, 최영심, 최훈열 - 가나다순)
이날 선임된 특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사진)을, 부위원장에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을 선출하고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원자로 정지,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내부철관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성경찬 특위위원장은 한국태권도 청소년대표팀 감독, 고창군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경력과 전문성은 물론,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특위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낼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원전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검사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알고도 재가동을 묵인하는 등 안전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져 지역민들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5명 징역 2~3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재판부가 청와대 전 실장과 수석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화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 조사 안전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Gutjap!' (Good Catch!) featuring a young man in a mechanic's uniform holding a wrench and a power drill. The text includes '자동차처럼 씹씹 달리고픈 그대에게' (For you who want to drive like a car), '굿잡!' (Good Catch!), and '굿잡! 군장대학교 자동차기계기술인력양성사업단' (Gutjap! Gunjang University Automotive Technology Training Project). Logos for '전라북도' (Jeollabuk-do) and '대학산학협력사업'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roject) are also present.